

4장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신냉전 보호무역과 세계화의 쇠퇴
2.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 수출주도성장의 쇠퇴
 - 내수경제의 쇠퇴
3. 시사점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1. 세계금융위기 이후 장기 대침체, 중국 추격, 미국 적자 누적
미국 패권 상실 및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훼손 우려
2. 미국 우선주의, 중국 관세부과, 첨단기술 통제, 러시아/중국 등 우려국 경제제재
 - 핵심산업 자국생산, 신냉전 경제블록 제도화
 - 군사동맹 : 2021년 미영호주 오커스, 2023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
 - 경제동맹 :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2021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
3. 탈세계화 흐름과 브릭스의 부상
 -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중립(참가 52개, 불참 12개, 중립 127개국)
 - 달러 대신 위안화 및 지역통화 사용(사우디 등 중동, 남미, 아프리카, 프랑스 등)
 - 미국 국채 수요 감소(2022년 중국 등 해외 보유비중 감소, 연준 양적긴축으로 감소)

➤ 브릭스의 부상

1. 실물경제 기반하여 G7보다 성장 잠재력 큼
(중동,러시아의 에너지/광물, 남미 농축산물, 중국 등 세계의 공장, 중국/러시아 자본과 기술 등).
2. 남아공 정상회의에서 11개국으로 확대, 세계 인구의 약 절반 포괄한 거대시장, 미국 경제제재시 대체시장과 세계 교통로.
3. 브릭스 경제권 협력으로 내재적 발전 가능
(그동안 선진국의 수탈, 편향적인 수출경제, 글로벌 공급망의 밑바닥 위치, 기술과 자본 종속, 저임금 노동)
4. 브릭스에서 향후 새로운 공동화폐 만들 경우 달러체제 균열 가능

➤ 미국중심 공급망 재편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

- 2021~2022년 보호주의법 제정 :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
- 미국에 인프라,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장비 투자에 보조금, 세액공제
- 중국과 러시아 원자재, 부품 사용 및 투자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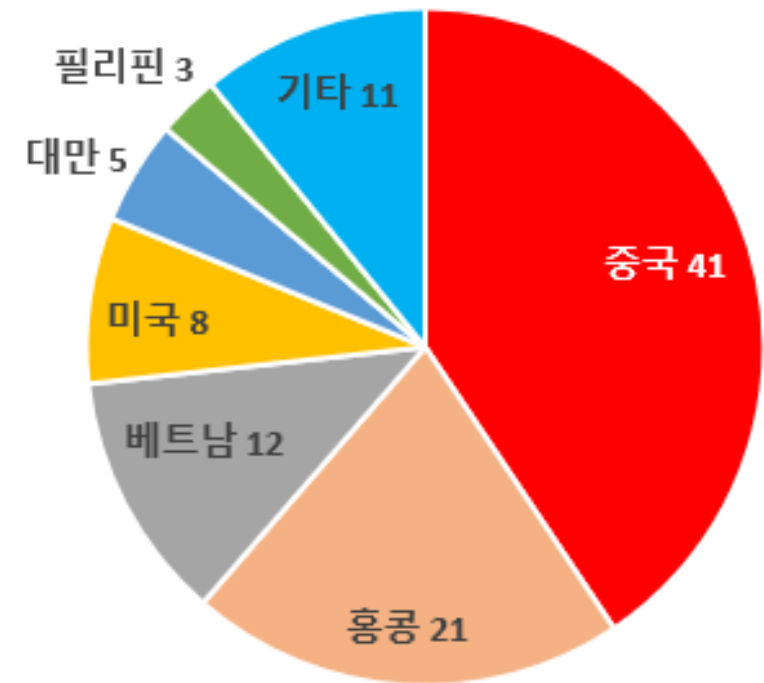
반도체법	주요내용	문제점
초과이익 환수	보조금 1.5억 달러 이상 받는 회사, 수익성 예상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이익 환수	초과이익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재무부 공개해야하므로 영업 비밀 유출우려
상세한 정보 제출	수익성 지표, 제조원가, 생산량과 재고, 10대 고객정보, 생산 장비, 원료명 등 미 상무부 제출	기업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시설접근 허용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저장장치 메모리는 안보관련 없음)
중국공장 증설제한	보조금 받은 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 불가(확장시 보조금 반환)	첨단반도체 5% 기술 업그레이드(범용 10%), 공장 설비 제한, 기준은 미국이 설정.

IRA	세액공제	지역 생산 요건	요구비율(%)						
			23	24	25	26	27	28	29
핵심광물 (니켈, 리튬 등)	\$3,750	①미국 ② FTA 체결국 ③북미재활용	40	50	60	70	80	80	80
배터리부품 (양극, 음극재)	\$3,750	북미 제조, 조립	50	60	60	70	80	90	100

➤ 첨단산업 미국이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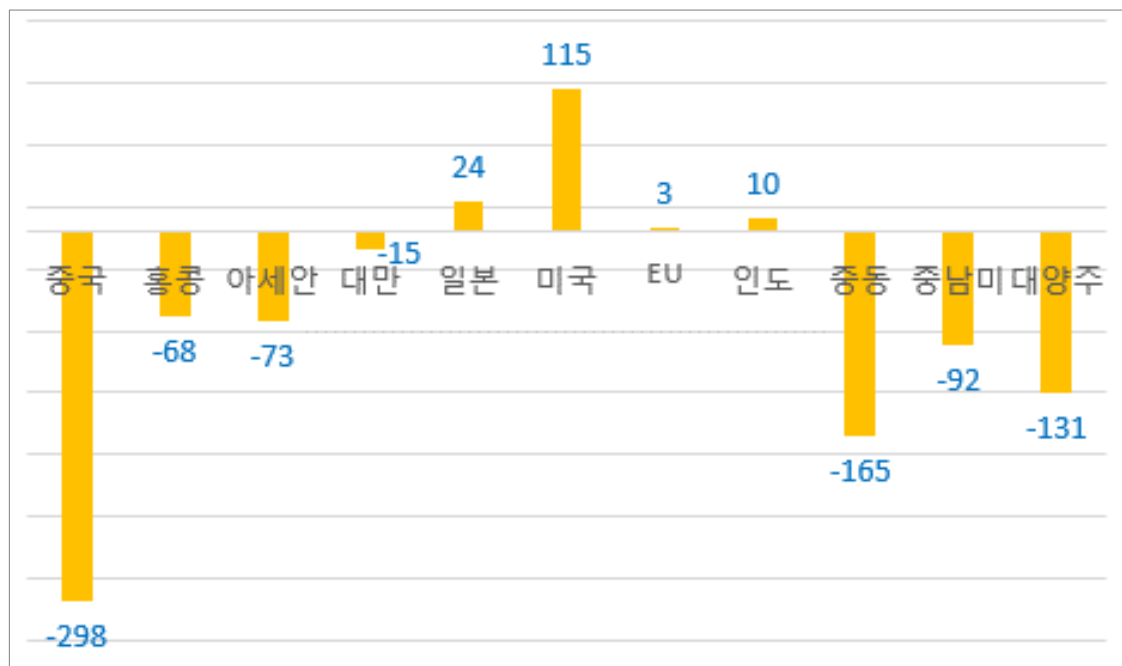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로봇틱스, 바이오 등 국내투자와 생산 감소
- 기업차원 미국시장 브랜드 가치, 배당금 늘릴 기회
- 국민경제 차원 총생산 감소하여 타격
 - 현지생산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 기술이전으로 독과점 지위 상실
 - 국내 연관산업 쇠퇴
 - 세수 감소
 -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쇠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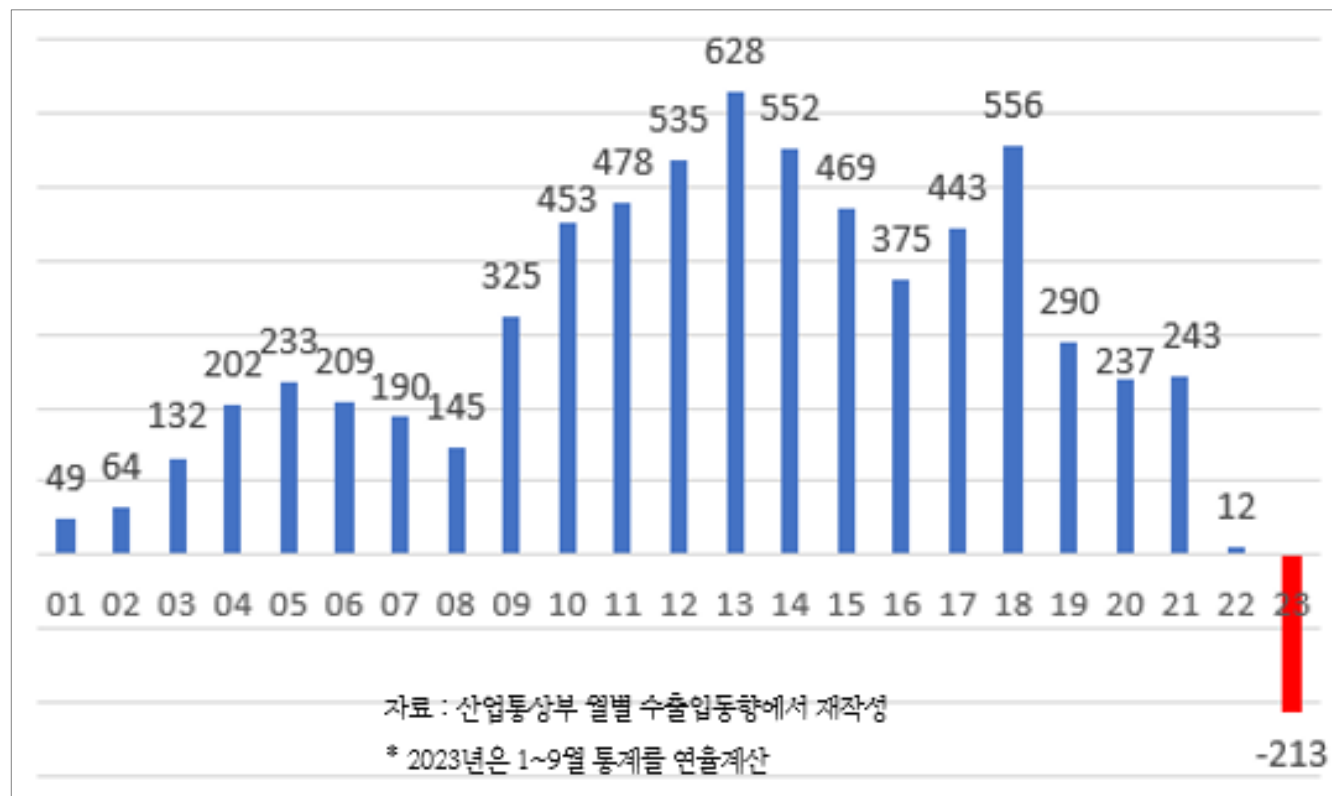


➤ 수출주도성장의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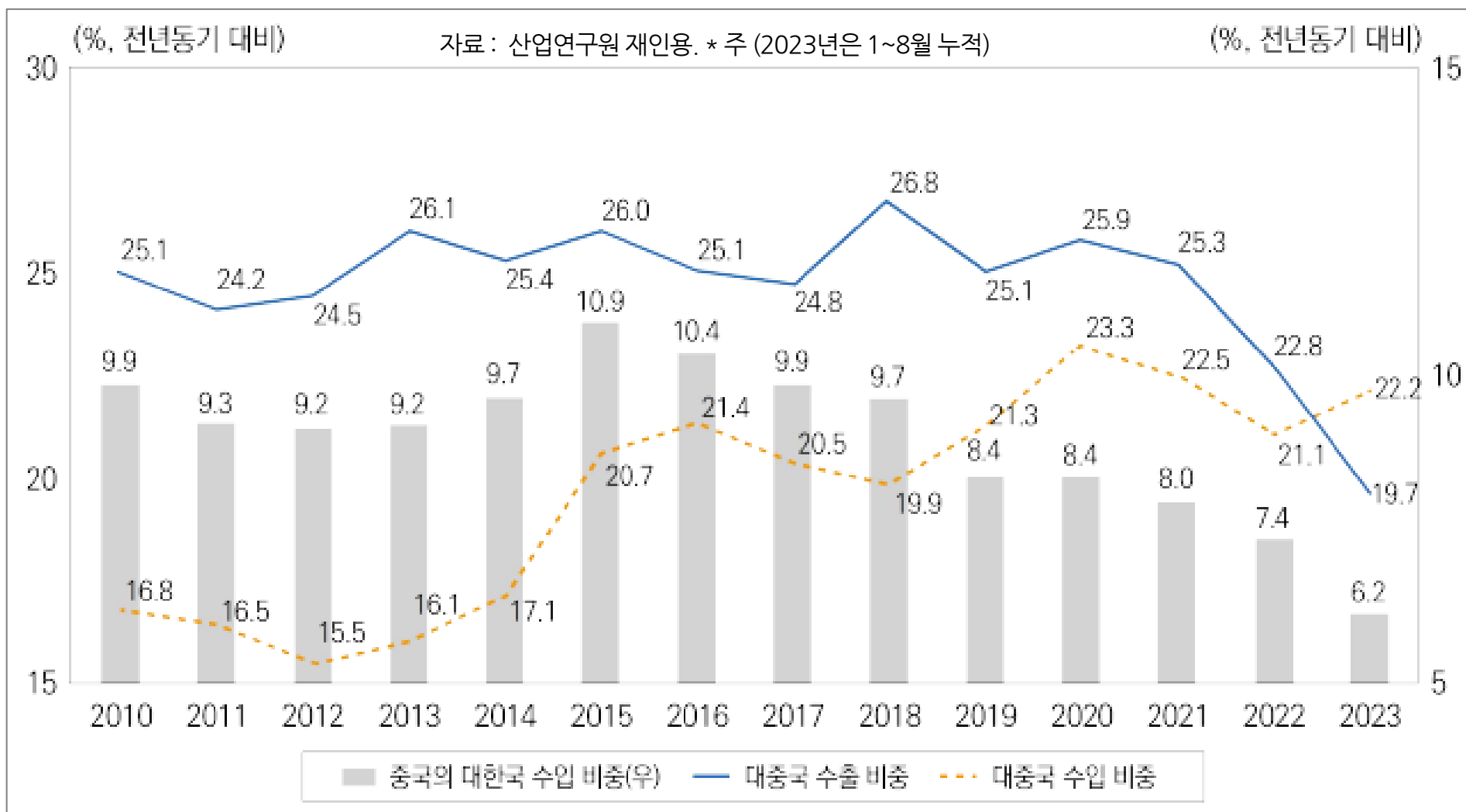
<2017 상반기 ~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증감 폭 비교>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 대중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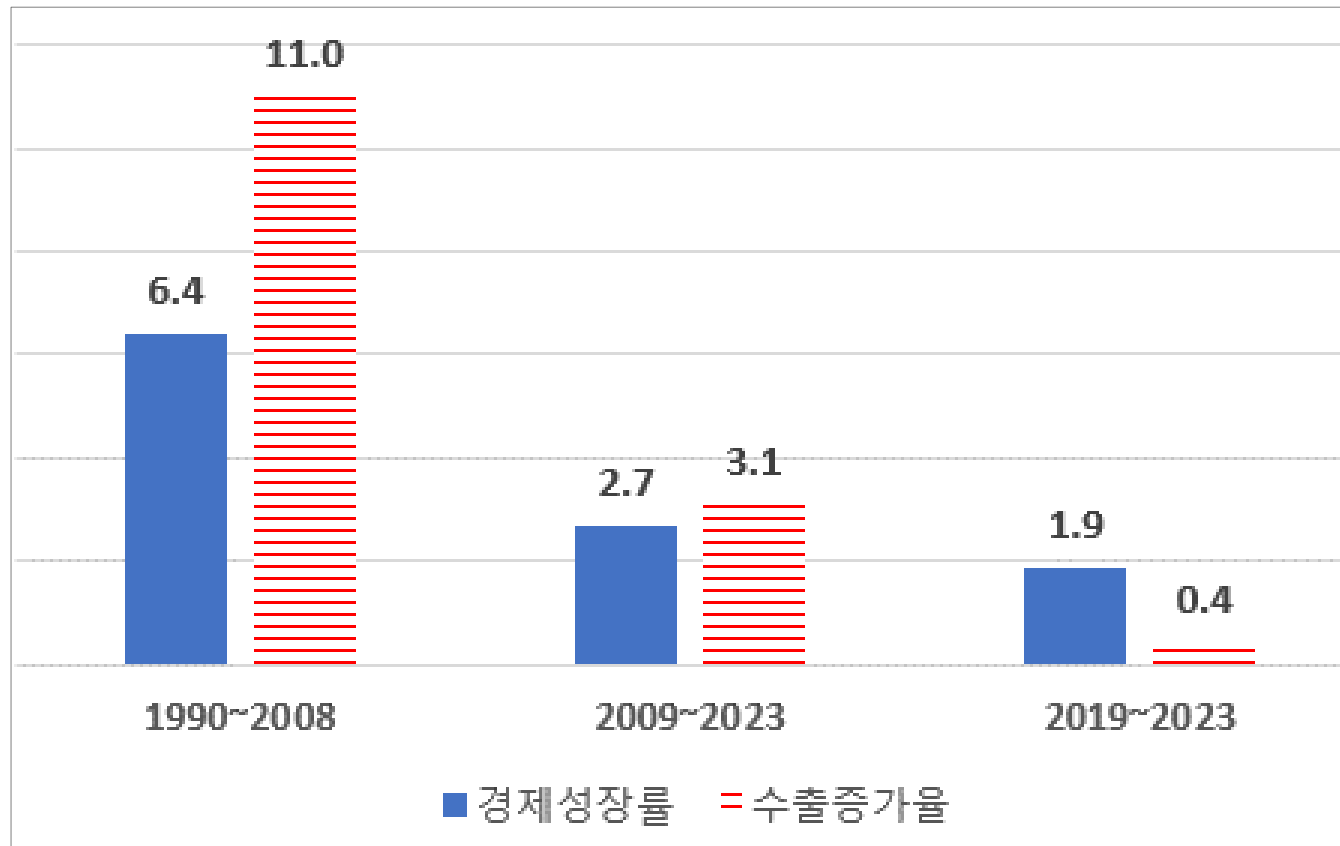


주요 품목별 수출비교

구 분	2017 상반기			2023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59,920	17.3	100.0	294,194	-12.8	100.0
○석유제품	15,562	38.2	6.0	23,977	-19.1	8.2
○화 공 품	32,274	21.0	12.4	47,752	-14.0	16.2
○철강제품	15,552	20.5	6.0	17,546	-12.3	6.0
○비철금속	4,534	16.0	1.7	6,652	-21.2	2.3
○일반기계	22,467	11.7	8.6	25,695	1.6	8.7
○정밀기계	4,576	98.7	1.8	4,288	-20.0	1.5
○자 동 차	19,221	4.2	7.4	34,071	46.8	11.6
○자동차부품	11,138	-5.6	4.3	11,173	-1.8	3.8
○선 박 류	23,077	39.8	8.9	8,866	8.8	3.0
○전자. 전기	86,887	17.0	33.4	84,810	-29.1	28.8
무선통신기기	10,513	-23.5	4.0	6,922	-16.6	2.4
컴퓨터	3,764	5.8	1.4	3,422	-61.1	1.2
가정용전자	4,238	-17.1	1.6	3,868	-8.3	1.3
반도체	39,238	48.7	15.1	40,203	-38.6	13.7
. 액정디바이스	8,754	12.1	3.4	1,840	-43.2	0.6
○플라스틱	4,087	7.9	1.6	4,749	-14.6	1.6
○섬 유 류	6,339	-0.1	2.4	5,412	-13.8	1.8
○생활용품	3,410	6.7	1.3	4,036	-6.5	1.4

➤ 수출주도성장의 쇠퇴

<시기별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 통계청에서 재작성

* 2023년은 상반기 통계

➤ 대중 수출감소 원인

- 중국의 산업고도화 + 한국의 탈중국 정책
- 단기적, 현상적으로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중국경제 침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
- 수년 전부터 중국 중간재 자립, 석유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 한국 수출 감소
- 한국은 중국 경제구조와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중국이 필요한 제품 공급에 소홀 + 미국 경제블록 가담 중국제재 앞장(화웨이, 마이크론), IRA 및 반도체법으로 중국 현지투자 및 중국산 부품/광물 사용 제약되어 중장기 전략투자 감소
- 중국은 경제제재에 맞서 독자개발 가속화, 한국의 수출은 계속 감소.
-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발언, 대만 문제 개입, 한미일 반중동맹 등에 보복 조치 가능
- 국내 반중 정서 고조(중국어 교사 수요 급감),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 중단/철회

< 삼성 중국법인 투자액 추이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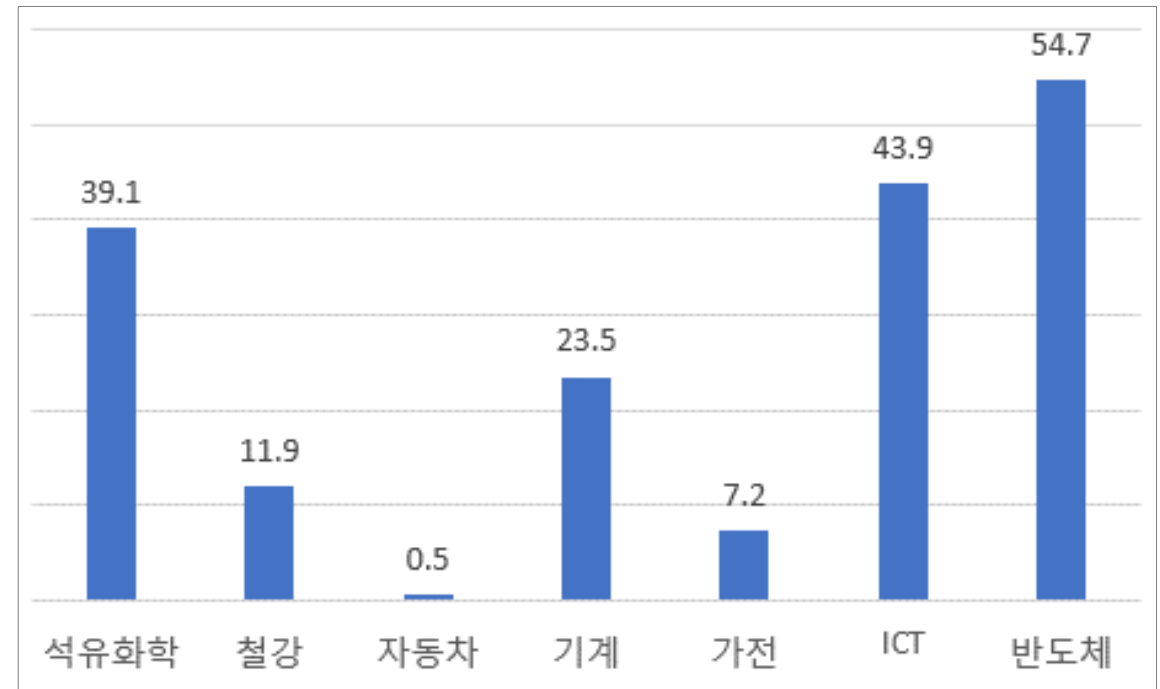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투자액	47	53	49	24	18	37	58	54	57	22
누적투자액	168	221	270	294	312	349	403	457	514	536

자료 : 삼성 중국법인
사회책임보고서

➤ 중국 수입시장 상위 5개국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7월	
						증감률
총수입	20,686	20,800	26,788	27,155	14,556	-7.6%
대만	1,728	2,020	2,515	2,402	1,087	-23.8%
미국	1,223	1,350	1,795	1,777	1,000	-4.5%
호주	1,195	1,149	1,622	1,407	918	10.5%
한국	1,736 (1)	1,734 (3)	2,136 (2)	2,002 (2)	901 (5)	-24.7%
일본	1,715	1,760	2,062	1,848	912	-16.6%

<한국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2022. 홍콩포함)>



- 중국의 1분기 전 성장률은 당해 분기 한국 성장률과 유의한 상관관계
- 2022년 반도체 수출 중국시장 의존도 54.7%, ICT 43.9%, 중국수요 없이 한국경제 회복 어려움
- 2023년 하반기에도 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 지속될,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면, 한국 2023년 경제성장률 1.2%p 하락시키는 압력 발생(현대경제연구원)

➤ 내수경제 침체



- 물가폭등과 실질소득 감소
-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제재로 공급발 인플레이션 발생. 40년 만에 최고치
- 석유, 천연가스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공공요금 인상, 전기세 인상
- 2023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 전년동기대비 0.8% 감소,
실질소득은 3.9% 감소(소비자물가상승률 3.2% 반영)
- 실질임금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2022년 2분기(-1.1%) ~ 2023년 2분기(-0.3%)
-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가 글로벌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실질소득 감소로 민생경제 파탄

➤ 내수경제 침체

- 고금리로 가계부채 위기
- 한국은 저금리 시절, 부동산과 주식에서 금융지대 형성, 대출규제 완화하여 경기부양
-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2%, 전세대출 포함하면 GDP의 157%
2023년 50년 만기 대출, 특례보증자리론 등 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
- 자영업자 대출 2023년 2분기말 1,043조원, 연체율 1.15%(8년만에 최고치)
- 그동안 저금리 상태이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팔고 나올 수 있었으나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수요도 급감하여 원리금 상환 위기
-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자산가격 상승, 은행에 유동성 공급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보장하고 위기시 공적자금으로 구제, 세계화 시대 부동산이 금융화되어 금융기관과 부자들을 위한 지대가 되었고, 현재는 고금리로 약한 고리 붕괴 우려.

➤ 내수경제 침체

- 달러체제에 종속된 통화정책
- 워싱턴 컨센서스 :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물가상승률 2% 목표.
작은 정부 지향하여 중앙은행의 목표에서 고용확대,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 등 제거.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물가안정에서 부동산, 주식 자산가격 상승 추진, 금융주주 이익 보장
한국 50년 만기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
-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 매입 금지, 민영화된 시중은행에서 정부/시민이 돈 빌려
쓰고 이자 내게 하여 은행 이익을 보장
- 부동산 및 채권(상위 1%가 보유)은 금융권과 부자들이 보유.
-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몰려 거품 누적,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에서 더 많은 이익 발생(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금융소득은 증가하고 가계소득은 정체
신냉전은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과 실물 사이 양극화를 심화시킴

➤ 내수경제 침체

- 환율변동과 외환보유고
- 달러체제에서 연준이 금리인상/인하하면 주변국도 그대로 따라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강달러에 수입물가 폭등, 외국자본 이탈, 원화가치 하락 등이 발생
- 기축통화 달러는 세계 수요가 존재하여 무한 발행 가능, 원화 경우엔 초인플레이션 발생
- 주기적인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현재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유지
- 외환보유고 유지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발행,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이차손실(금리차이), 환율조정 등으로 거대한 비용 발생, 국민 혈세 투입, 1998~2022년 누적 손실액 12.7조원
- 미국은 해외국가들이 달러표시자산 많이 보유할수록 이익.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이자가 낮고, 미국이 보유한 해외 주식/채권은 이자가 높아 금리차이. 미국은 마음껏 달러와 국채 발행하고 천문학적 부채에도 풍요로운 소비 가능
- 외평기금 확대는 금융세력과 자산계급, 고환율 선호하는 수출대기업 등에 유리.
미국은 달러패권 유지 위해 신냉전 추진, 경제블록에서 기존 금융시스템 강화.

➤ 내수경제 침체

• 공공서비스와 재정 정책

- 복지국가는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세금 징수, 화폐는 공공재(세금과 국가부채 표시) 과거에 중앙은행은 공익목적으로 신용을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 추구
-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에 편승하여 이념대결 추구,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지향, 재정 건전화와 보조금 축소 + 부동산/금융자산 세금 제거, 법인세 인하 = 세수 부족, 공공서비스 제공할 재정 축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년간 세수 효과(조원)>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구분	22년 세법개정안	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23년 세법개정안	합계
소득세	-18.2	0	-3.2	-21.4
법인세	-34.7	-13	0.7	-47
증권거래세	-9.4	0	0	-9.4
종합부동산세	-9.8	0	0	-9.8
기타	-1.3	0	-0.5	-1.7
합계	-73.4	-13	-2.9	-89.3

➤ 시사점

- **한국** 최근 3년간 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
신냉전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년도	2021	2022	2023	2024*
OECD:한국	5.8:4.3	2.9:2.6	2.7:1.8	2.9:2.1

- **핵심산업의 자립화** –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의존 경제 탈피.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식량 자립화. 국내산업기반 강화 고용안정에 기여
- **확장적인 재정정책** – 시장화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축소. 한국 공공사회지출 12.3%로
OECD(20.1%)의 61.2%에 불과(하위 3위). 반면 국방비/기업지출 비중은 평균 이상.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은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기능 약화.
공적 이전소득 증가는 노동자와 서민의 지불능력 확대에 내수 진작
- **중립적인 외교통상정책** – 미국 주도 프랜드쇼어링 탈피, 최대시장이자 에너지 강국인
중국/러시아와 중립적인 통상 정책 전개. 이들의 경제제재에 앞장설 이유가 없음.
- **자주적인 통화정책** – 달러의존 축소 및 환율안정 도모, 중앙은행이 고용창출/경제성
장 목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 줄이고 고환율에 따른 물가폭등 완화. 실질소득 상승